

민주 원내대표 후보들 “내가 안철수와 협력 적임자” 민주당내 ‘친노세력’

김동철·우윤근·전병현 의원 공식 출마 선언

저마다 ‘안철수 마케팅’ 표밭같이 분주

‘호남안배론’ 거론 속 ‘선명야당론’ 맞서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안철수 마케팅’을 내세우며 표밭같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지난 전대에서 지도부에 호남이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호남 안배론’이 부상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자신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협력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

했다.

우선, 김동철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은 야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안 의원과 소통을 한다면 야권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은 야권의 정치적인 동반자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관계가 부각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에 호남이 진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는 호남이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있다”며 “박빙의 선거구도에서 이 같은 변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에 호남이 진입하지 못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는 ‘호남 안배론’이 거론되고 있어 원내대표 경선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일단, 전남의 우윤근 의원과 광주

의 김동철 의원은 ‘호남 안배론’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은근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치적 터발인 호남을 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호남 원내대표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선명 야당론’을 내세우며 ‘호남 배려론’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 누리당의 모만한 독주에 맞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양보할 때는 전략적으로 임하겠다”며 ‘선명 야당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 한 명을 뺏는 원내 대표는 계파나 지역 안배의 대상이 아니다”고 ‘호남 배려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

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127명 모두가 주류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고 3년 후에는 의회 권력을 교체, 그 힘을 바탕으로 4년 후 행정부 권력을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단합시켜 강한 야당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김 후보와 우 후보의 단일화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 후보가 단일화보다는 결선 투표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을 매개로 하는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도 있지만 호남 표심의 분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박기준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등 합의 사항에 대해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오른쪽은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委 확정

무소속 안철수(사진) 의원이 활동하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로 7일 확정됐다.

민주당 박기준 원내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로 결정됐다”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안 의원은 이로써 국회 입성 2주만에 상임위를 배정받게 됐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원래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상임위를 양보하고 정무위원회로 옮겨 가기로 하고, 안 의원이 그 자리에 가기로 해 해법을 찾았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

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지켜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나라도 상임위를 바꿔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복지위 배정에 대해 “희망 상임위 중 하나였다”며 “민생의 최전선 분야인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돼 의미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내현, 대구서 ‘영·호남 대학생 교류 행사’

대구에서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이 동·서간 상생과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7일 저녁 7시 대구 중구 덕영치과에서 ‘제11회 영·호남 교류 대학생 환영의 밤’ 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003년 대구고경장 재직 당시 전남대와 경북대, 민족통일 협의회에 제안해 성사된 행사다.

이후 영·호남 지역 대학생들은 매



년 이 행사를 통해 동·서간 상생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날 행사에는 임내현 의원과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 경북대 강호율 학생처장, 대구시 청 공무원, 영·호남 지역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개헌 논의 본격화

의원·전문가 등 30명 ‘헌법개정연구회’ 구성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가 설치된다. 오는 15일까지 구성되는 개헌연구회는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준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양당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여야 대표와 원

내대표, 정책위원장이 참여한 ‘6인 협의체’의 개헌 논의 기구 설치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여야 협의로 국회에 개헌 논의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정치권 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헌연구회 회장은 양당이 공동으로 맡되, 대외적인 회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양당은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와 관련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때 국회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적 있으나,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야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NPL(부실채권)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오천경매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실전 사례 교육
- 1인 1물건 추천
- 단독/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1,100만원
-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답.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잔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도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어등산 골프장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광주시의회 해외연수 정책 반영 ‘미흡’

‘참여자치 21’ 6년치 분석

43건의 연수 중 20건밖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46.5%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의무사항인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연수 후 정책반영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조사기간 내 총 43건의 연수 중 단 2건뿐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6대 의회 들어 해외연수도 많진 않았지만, 참여자치 21의 분석 중 결과 보고서가 46.5%밖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오섭 운영위원장은 “의원 연수 중 집행부와 다른 기관들의 해외행사에 참석하는 연수는 결과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데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